

# 보험산업, 내년 CSM 하락 전망... '저성장 뉴노멀' 위기

(보험계약마진)

내년 수입보험료 2.4% 증가 전망  
당국, 계리적 가정 강화 등 규제  
"CSM, 기존대비 1~9% 가량 줄 것"

내년도 보험산업의 전망이 어둡다. 올해까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해 온 보험업계가 수입보험료 감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규제에 따른 보험계약마진(CSM) 하락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보험산업은 성장성 둔화, 수익성 악화, 건전성 악화 등이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규제 영향까지 고려하면 실제 악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2025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2.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4.3%, 0.3% 증가가 예상된다. 생명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감소로 0%대 성장률에 불과하다는 분석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보험산업의 위기 이미지

이다. 초회보험료는 건강보험의 증가에도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감소로 전년 대비 9.2% 감소할 전망이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경영환경 전망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을 종합해 보면 성장성 둔화, 수익

성악화, 건전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전망에 반영하지 않은 규제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수치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규제 역시 보험산업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계리적 가정 강화에 따라 CSM 감소는 불가피하다. 최근 금융당국은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무·저해지보험, 단기납 종신 등 계리적 가정을 강화했다.

계리적 가정 강화에 따라 보험사는 무·저해지보험(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의 경우 이전보다 낮은 해지율 수준을 사용해야 한다. 단기납 종신보험도 저축성보험 해지율 등을 준용해 30% 이상의 추가 해지를 설정해야 한다. 해당 개선안은 올해 말을 기점으로 적용된다.

설용진 SK증권 애널리스트는 "기존보다 현저히 보수적인 가정이 적용됨에 따라 CSM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개선안 적용 시 BEL(최선추정부채)을 증가시키는데 반대급부로 이익계약이라면 CSM이 감소할 것"이라며 "기존 CSM 대비 적게는 낮은 한 자릿수(1~3%), 많게는 높은 한 자릿수(7~9%)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CSM 감소는 보험사에 특히 악영향을 끼친다. 주요 보험사의 보험손익에서 CSM 상각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CSM 하락에 따라 영업이익도 같이 감소해서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합산한 영업이익 기준 올해 상반기 CSM 상각익의 비중은 대형 손보 3사가 40%대, 삼성생명과 동양생명이 50%대, 한화손보가 61%, 한화생명이 98%로 나타났다.

만약 CSM 잔액이 1% 감소한다면 2025년 영업이익은 손보 4사 및 삼성생명 평균 0.5%, 한화생명 0.8%, 동양생명 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계리적 가정 개선안 등의 불확실성 요인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악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하기엔 영향을 면밀히 예상하기가 아직은 어렵다. 최소한 2025년 1월의 금리기간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지갑 닫는 1인 가구... 韓 소비구조 '흔들'

다인 가구 비해 경제형편 취약  
생활비·주거비 부담 등 영향

1인 가구가 국내 소비 지출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지만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우리 경제의 소비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한국은행이 펴낸 'BOK 이슈노트-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소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5.5%로, 가구 원수 기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17년 28.6%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통계청의 2022년 장래가구추계에서 오는 2030년 1인 가구 비중을 35.6%로 전망했지만 이미 지난해 해당 수준에 도달할 만큼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1인 가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 1인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은 지난 10년간 빠른 속도로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체 소비지출의 약 20%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소득, 자산, 고용상황 측면에서 살펴본 1인 가구의 경제 형편은 대체로 다인 가구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이다. 1인 가구는 청년과 고령층의 비중이 높는데 연령별로 나눠보면 청년층 1인 가구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컸고, 고령층 1인 가구는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취약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소비성향도 약화되고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은 "팬데믹 이후 1인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은 여타 가구보다 더 크게 약화되면서 경제전체의 소비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소비성향 둔화는 우리 소비의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9~2023년 가구원 수별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 변화 조사에서 1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 감소율은 5.8%(0.78→0.74)로 가장 높

았다. 이어 ▲3인 가구 -4.3%(0.69→0.66) ▲2인 가구 -2.5%(0.71→0.69) ▲5인 이상 -1.8%(0.77→0.76) ▲4인 가구 -0.5%(0.74→0.73)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1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약화된데는 1인 가구의 소득·자산 등 경제 형편이 취약한 상황에서 팬데믹 기간중 ▲주거비 상승 ▲생활비 부담 증가 ▲임시·일용직 중심 고용 충격 ▲위기에 따른 소득 충격 등의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수기반을 튼튼히 하려면 1인 가구의 주거·소득·고용 안정을 위한 연령대별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재호 과장은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높은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한 주거 안정대책이 절실하다"며 "고령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열악한 소득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빈곤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등 해외사례처럼 전체 취약 계층을 포괄하는 정책 틀 안에서 1인 가구 문제를 균형감 있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이승용 기자 ls2665@

## 스тей킹·에어드롭 가이드라인 미비 "정부-정치권, 제도적 보완 서둘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업계 "무리한 과세, 위험한 상황 초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면서 과세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게 됐다. 시장에선 제도적 보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의 과세를 2027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 중 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 (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소득이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의 투기적 성격을 이유로 과세 유예에 반대했고, 기본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뒤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고수했지만 입장을 선화하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두 차례 연기된 데 이어 2025년 시행 계획도 2027년으로 미뤄지면서 총 세 차례 연기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2년 안에 제도정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구체적인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법률, 제도적 기

반 등이 미비한 상태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1단계가 시행된 했지만 투자자 보호 중점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은 없는 상태다. 실질적 규제가 담겨 있지 않아 반쪽짜리 법이란 지적이다.

다양한 사업 모델과 새로운 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법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중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현재로서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추적하기 어렵다. 주식시장과 다르게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초단위로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제시한 취득원과 실질적 소득을 산정하는 방안이 따라가지 못한다.

또한 해외거래소 등을 통한 경우 최초 취득가격을 추적하기 어렵고 여러 거래소를 거칠 경우 지갑 주소와 거래내역을 거래소에서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무엇보다도 스테이킹(예치), 에어드롭(무상 지급), 채굴 등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과세안의 경우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탈세에 대한 위험도 문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도적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과세는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주요국들은 유연하게 과세 비율을 설정해 미국은 10~37%, 일본 15~55%, 영국 10~20%, 호주 5~40% 수준으로 스테이킹, 에어드롭, 채굴 등에 대한 과세 비율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년 유예가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 금융당국의 논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 방어 양식 등 물류 루트 확대... 가격 경쟁력 높인다

>> 1면 '대량구매 등 규모의 경제'서 계속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 확대를 통해 단위당 비용을 낮추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대량 구매와 생산공정의 자동화, 전문화를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이마트는 지난 7월 이마트와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의 매입 조직을 통합했다. 두 채널의 구매 물량을 결합해 대량 매입을 추

진함으로써 구매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급업체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며,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량 공급 확대를 위해 이마트는 신규 농가 및 양식장과의 계약도 늘리고 있다. 특히 해산물과 과일 등 식품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철 방어를 겨울까지 축양하는 방어 양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통영, 고성, 거제, 사천 등지에 새로운 물류 루트를 확대했다. 또한,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전문 바이어들이 전국 산지를 직접 찾아 신규 농가를 발굴하고 있다는 게 이마트 측의 설명이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이마트의 이 같은 규모의 경제 전략은 코스트코, 이케아와 같은 대형매장이 접근성 높은 곳에서 대량 상품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과 비슷한 것으로 읽혀진다"며 "규모의 경제는 기술적 상태, 시장 크기, 접근성, 규모 차이 등에 따라 그 효과가 결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